
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3. 2. 2.



국민권익위원회

순서

I.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	4
IV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	11

I. 추진성과와 평가

1 주요 정책 성과

- (고충처리) 국민의 입장에서 위법·부당·소극처분으로 인한 민생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조정을 통한 집단민원 해결로 주민숙원 해소
* △한센인촌 폐축사 등 주거환경 개선, △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권고, △출산장려금 등 지급요구 의견표명, △용담댐 환경피해 대책 마련 등
- (제도개선)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분석, 국민생각함 정책제안·토론, 관계부처 협업으로 고충을 유발하거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
* △도서(섬) 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, △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, △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, △ 공공기관 비위행위 징계 실효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
- (부패방지)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시행(5.19),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면 개편, '22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공직사회 청렴수준 향상
* 국가청렴도(CPI) : ('18)57점/45위→('19)59점/39위→('20)61점/33위→('21)62점/32위→('22)63점/31위
- (신고자보호) 부패신고 비밀보장 강화를 위한 변호사 대리신고제 도입, 신고자 포상금 상향(최대 2억→5억)으로 신고자에 대한 지원 확대
* 부패·공익신고 등 신고자 보호 168건 처리, 보·포상금 등 약 38억원 지급('22.5~12)
- (행정심판) 청구서 자동완성 제공 'EASY 행정심판' 개발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'원스톱 행정심판' 연구용역('22.12월)으로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
* 행정심판 총 14,648건 처리, 1,007건 인용 해결('22.5~12)

2 평가 및 보완사항

-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웠던 현장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주력할 필요
▣ 지속되고 있는 민생현장의 권익구제 요구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활성화 지속 추진
- 국민의견을 정책 발굴과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은 구축되어 있으나, 과학적 분석·검토 및 적극적 개선 노력은 부족
▣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'따뜻한 동행', 공정과 상식을 회복한 '반듯한 나라'의 제도적 기반 구축
- 국가청렴도(CPI)가 개선 추세이나, 사회 곳곳에 부패관행이 잔존하고, 국격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('22년 세계 31위/180개국)
▣ 반부패 제도 내재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고, 정부의 정책 성과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국내·외에 정책성과 홍보·확산 활성화

II.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 추진 여건

- '3高 1低' 경제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구제 요구 증대
 -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(3高)이 세계적인 저성장(1低)과 맞물리면서 소기업·소상공인 및 서민·취약계층의 민생고충이 증가할 우려
 - 민생현장과의 소통 강화, 권익구제 접근성·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권익보호에 위원회의 업무역량을 집중할 필요

정책방향

⇒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적극해소로 실질적 권익보호

- 출범 2년차 정부에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
 - 새로운 국정과제와 추진체계를 통해 국정운영을 온전히 시작하는 첫 해를 맞아 국민은 정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요구
 - 국민 안전, 생활 속 불편 해소, 규제 혁신,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 관심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개선 필요

정책방향

⇒ 불합리한 제도, 관행 및 규제에 대한 국민체감 제도개선

-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분출
 - 국가청렴도(CPI) 등 각종 국제 반부패 지수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엄격한 국민의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
 -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·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동력을 확보할 필요

정책방향

⇒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·상식 확립으로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

2 업무 추진 방향

비전

국민 권익이 보호되는, 청렴한 대한민국

목표

**실질적
국민권익 보호**

**국민체감
제도개선·규제혁신**

**세계 20위권
청렴선진국 진입**

핵심
추진
과제

1

국민고충·사회갈등 적극 해결로 민생안정 국정기조 뒷받침

2

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·제도 개선

3

부패·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

4

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

5

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

Ⅲ.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

① 국민고충·사회갈등 적극 해결로 '민생안정' 국정기조 뒷받침

◆ 국민고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결하고, 빈발 민원은 「기획조사」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

□ 현장중심의 적극적 국민고충 해결

- '달리는 국민신문고(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)'를 통해 소외지역·취약계층의 고충과 지역현안을 현장에서 해결(약 100회)
-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 및 취약 지역·업종을 대상으로 「기업고충 현장회의」 실시(월1회)
 - ※ 인·허가, 고용, 판로, 자금 등 소기업·소상공인 경영상 고충에 대한 현장상담 및 해결
-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사회 현안 집단고충민원(100인 이상)의 경우 적극적 현장조정 등으로 신속히 갈등 해소*
 - ※ 신속·효율적 처리를 위해 '집단민원 조정해결 TF' 설치('23.2월)
 - * 장기 미해결 사안에 대한 현장확인, 기관간 조율 강화 등으로 사회갈등 확산 방지 (설악산 케이블카 협의절차 재개,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요구 사례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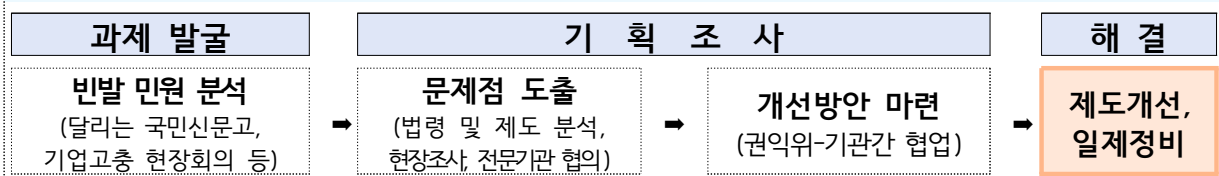
□ 빈발되는 민원은 「기획조사」로 국민고충 근원적 해결

- 빈발민원 또는 전국적 일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, 「고충민원 기획조사」를 통해 법·제도적 미흡 요인 개선 및 현장 문제를 구체적 해결
 - ▶ 주거, 환경, 안전, 교육 등 민생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해결

【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과제(안)】

- ✓ (안전)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위 표시 정비
- ✓ (환경) 주민 축사악취를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
- ✓ (생활불편)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
- ✓ (취약계층) 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

【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체계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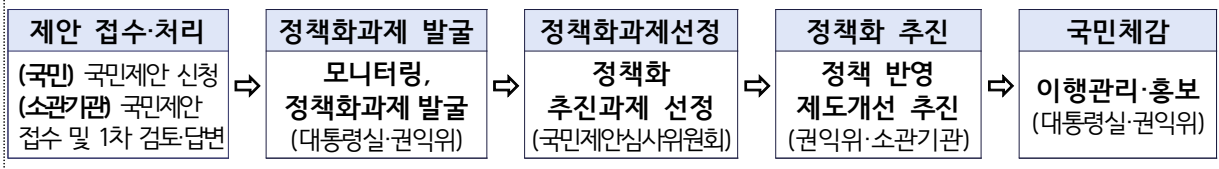
2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·제도 개선

◆ **민원·제안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및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**

□ 생활공감형 국민제안 정책화를 통해 대국민 소통 체감도 제고

- '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'로 신청된 제안을 전수 점검·분석하여,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화 적극 지원

【국민제안 검토·처리 흐름도】



- ▶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책화 가능과제 발굴, 민원빅데이터와의 연계·통합 분석, 제안별 공론화(국민참여토론 게재) 등 지원
- ▶ 민간전문가 중심 '국민제안심사위원회'에서 정책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, 대국민 발표(분기별) 및 이행상황 점검

【국민제안 정책화 사례】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연령 조정

현 재(AS-IS)	개 선(TO-BE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전이라도 만18세가 되면 양육지원비 지급이 종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자녀의 고3 재학 중에는 만18세가 되더라도 계속 지원받도록 지급연령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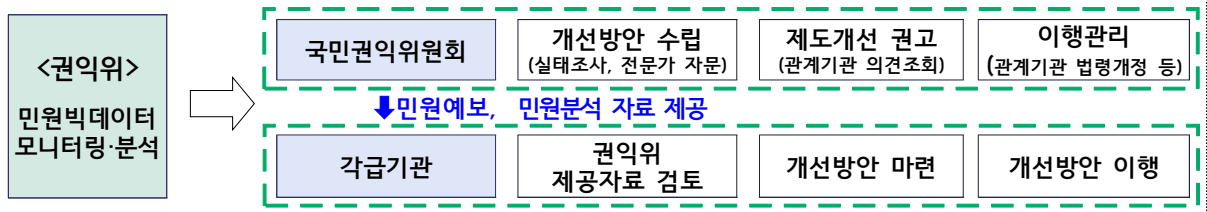
- '국민제안 시스템'을 대국민 통합 소통포털로 개편(~'23.7월)
 - ▶ 국민이 더 쉽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▲민원·청원 처리절차 개선 ▲데이터 융합분석 도입 ▲보안 강화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

□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

- 국민신문고·새울(지자체) 등에 축적되는 1,300만건('22년)의 민원·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*하여 국민 삶 개선에 활용

* 현안별로 민원데이터를 추출하여 관련 통계,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→ 관계기관 제공

【민원분석의 정책연계 흐름도】



- ▶ (기획분석) 국정과제의 주요정책이 국민생활에 안착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사각지대를 민원분석을 통해 발굴·보완·발전 방안 제시
- ※ 주요 국정현안(3대 개혁(연금, 노동, 교육), 청년 등)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 실시

【국정현안 관련 민원분석 주제(안)】

* 민원건수는 최근 2년간('21.1.~'22.12.)

- ✓ (연금) 국민연금 부담금액·급여,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(17,200여건)
- ✓ (노동) 구직급여 반복수급, 불명확한 경제제재, 산업재해 관련(24,000여건)
- ✓ (교육) 입학전형, 특례제도, 학생배정 등 고교진학 관련 학생·학부모 불편사항(56,200여건)
- ✓ (청년) 청년 주거, 청년 취업, 취업지원제도 관련 불편 및 불공정 사례(35,800여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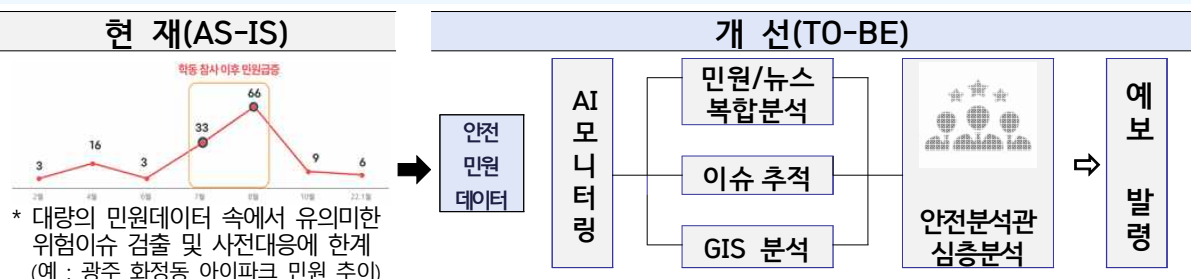
- ▶ (제도개선) 불합리한 법령·제도, 관행 등을 발굴,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, 부패와 고충을 근원적으로 예방

【분야별 제도개선 추진과제(안)】

부패방지 제도개선	공직사회 투명성 제고	· 공직자 관사운영을 투명하고 검소하게 개선 국정과제 13-3 · 지자체 자체 감사체계 운영의 독립성·공정성 강화
	교육연구 분야 투명성제고	· 대학발전기금의 강제 모금과 자의적 집행 등 운영·관리 부실 · 대학연구개발비·교수창업·학교기업의 투명성 부족
고충해소 제도개선	불합리한 국민부담 해소	· 생계가 어려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압류처분 · 착오 정도의 작은 실수에도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 부과
	취약계층 보호 강화	·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제재 및 학대 피해자 보호 미흡 · 위탁아동 수술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한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확대

- ▶ (민원예보)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론 등 관련 정보와 융·복합 분석으로 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,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예보 발령

【민원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예보 시스템 체계도】



* 일시적 급증 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키워드(붕괴, 사고, 폭발 등)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도출한 후 분석관이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조치요구(평균 2~3일 내)

3 부패·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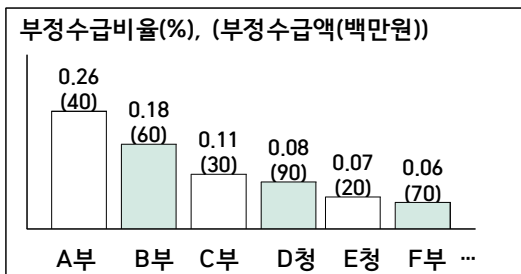
◆ 나라돈의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하고, 공공부문의 청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청렴도(CPI)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 기반 마련

□ 보조금 등 부정사용 근절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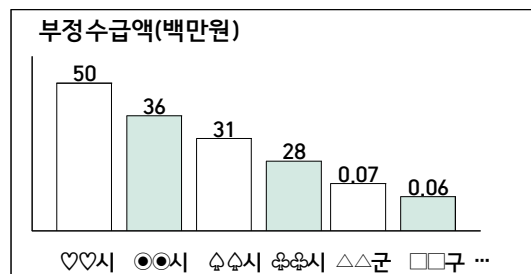
- 민간,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관련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
 - ▶ 권익위 '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'를 통한 상시 신고접수 및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(5~7월 예정) 운영으로 부정수급 강력 대응
 - ▶ 기관별·사업별 공공재정 현황, 부정수급 금액 및 비율, 환수액 등을 청렴포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(연2회→상시입력)하고 대국민 공개

【공공재정 부정수급·환수내역 정보 대국민 공개화면(예시)】

< 중앙행정기관별 부정수급비율 >



< 지자체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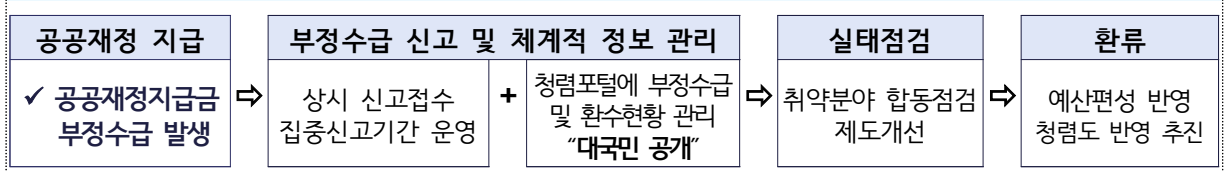


- ▶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, 신고가 집중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, 관련 제도를 개선*

* (예시) △보조금 등 수급기관 내·외부 감사 시 필요적 감사 항목으로 반영, △고의 또는 상습 부정수급자에 대한 필요적 형사고발 기준 마련 등 권고

- ▶ 기관별 부정수급 관리현황을 공유(국무회의 등)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고, '기관별 자체 점검노력'을 청렴도평가에 반영 추진

【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】



□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및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정비

-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와 청렴교육 강화로 공공부문 청렴역량 제고
 - ▶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종합하여 청렴도를 평가하고, 평가 대상기관 확대[(‘22) 569개 → (‘23)약 670개]

【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】

종합 청 렴 도	+	청렴체감도	외부·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·경험(이해관계자 설문조사)
	+	청렴노력도	반부패 추진체계 구축·운영 실적 및 효과성 평가(지표별 정량·정성평가 및 설문조사)
	-	(감점)부패실태	징계·감사·수사 등 적발된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(부패사건 통계)

- ▶ 토론형 학습 등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*하고, 기관주도 자체 청렴교육 활성화와 법정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규범 정비**

* 'MZ세대 과정', '청렴감성지수 향상 과정' 등 체험형·참여형 콘텐츠 개발 확대

** 기관 자체교육 다각화 및 교육 이수실적 부진기관 관리 등 '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' 개정

- 제·개정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부패위험 사전 차단
 - ▶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령의 부패유발요인*을 발굴·개선(연중)하고,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(약 10만개)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수 평가(‘23~’24)
 - * 특혜발생 가능성, 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, 이해충돌 가능성 등 평가

□ 부패·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·지원 강화

-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·지원 규정을 통일*하여 국민 혼란 예방
 - *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, 이행강제금, 위반자 제재수준 등 통일
-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(4~30%)을 30%로 통일하고, 지급 상한액(30억)을 조정·폐지 추진
- 사전 검토회의 정례화 등 절차를 개선하여 신고자 보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, 보호규정 위반을 징계기준에 명시해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

4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

- ◆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반을 구축하고,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도약의 기회 보장

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**국정과제 91-1**

-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'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'(23.1월 신설)를 통해 종합적·체계적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

【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주요 기능】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✓ 공공부문 '공정채용 기준' 마련 | ✓ 기관별 인사규정 컨설팅 |
| ✓ 공정채용 실태조사 관리대상 확대 | ✓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 운영 |
| ✓ 채용비리 상시 신고 접수·처리 | ✓ 채용비리 신고자 보호·포상 |

- ▶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을 일괄정비(약 1,300여개, '23~'25)하여 불공정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, 공무원 등 비공무원 '공정채용 기준' 마련
- ▶ '23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('23.2~10월) 및 현안발생 시 수시점검
- ※ 조사 결과 채용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, 피해자구제 등 후속조치

□ 국가자격시험 제도·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**국정과제 91-1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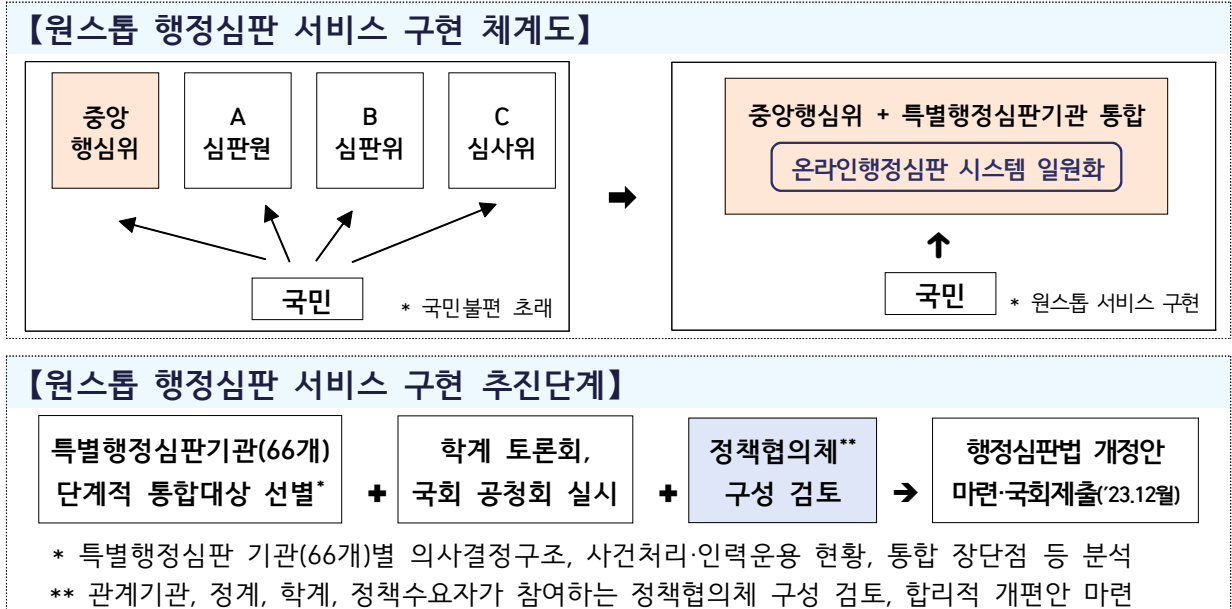
-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세무사·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(15종)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*를 개선
- * 공직자에게 '전문자격 자동부여' 또는 '시험과목 일부 면제' 등 혜택
-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조치 및 공직 퇴임 이후 전문자격사의 일정기간 수입제한 근거 마련
- 청년층 수요가 높은 전문자격사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추진

5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

◆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,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

□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 국정과제 13-4

-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(66개)과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와 신뢰도 제고
 - ※ 특별행정심판기관 대부분이 처분기관의 상급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심리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
-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·처리·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'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' 통합('25년 전기관 통합목표*)



□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로 권리구제 기회 확대

-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선제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*
 - *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변경(행정심판법 개정) : (현행) 청구인 → (개선)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
- 국민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'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(EASY 행정심판)'의 제공기관 확대*
 - * ('22년) 중앙행정심판위 → ('23년) 시·도, 시·도교육청, 검찰청 등 53개 행심위로 확대

IV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 : 규제혁신

- ◆ 반부패 법령과 제도의 규제 품질을 제고하고, 고충처리·행정심판·제도 개선 등 위원회 전 역량을 집중하여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

□ 반부패 법·제도의 규제 품질 제고

-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기준·방식 등 발굴·정비
※ 피규제자 관점의 수요 분석을 통한 법령·해석기준 정비 및 보완
-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·지원 규정을 통일*하여 국민 혼란 예방
*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, 이행강제금, 위반자 제재수준 등 통일

□ 일선 현장의 숨은 규제 적극 발굴·해소

- 빈발민원에 대한 「고충민원 기획조사」의 한 분야로 ‘규제혁신’ 분야를 선정하여, 일선 현장의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

【규제혁신 기획조사 과제(안)】

경제주체 간 분쟁 유발 사례	·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세부기준 마련 · 소규모 철거공사 발주 시 입찰참여자에게 도면 등 충분한 정보 제공
비효율적 기업불편 및 재산권 침해 사례	· 군(軍) 사유지 무단점유로부터 주민 재산권 보호 · 기업이전 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과정의 절차상 미비점 개선

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문화 조성

- 거부된 제안·민원에 대한 재신청 또는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* 발굴

【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 사례】

- ✓ 사례 ① :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시 증빙을 위한 외국어 번역자료의 인정범위 확대
- ✓ 사례 ② : 온라인 평생교육수업의 본인인증 시 민간인증서 포함 등 다양화

-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*하고,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
* 제도 운영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(적극행정 운영규정)에서 법률로 상향, 적용대상을 현행 중앙부처·지자체에서 공공기관까지로 확대